

정부·업계 민물장어 자원 관리 강화 나서...  
 제5차 민관 협의회 개최

- 국내 실뱀장어 입식량 관리 방안 논의 및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중우)는 5월 29일(금) 정부, 지방정부, 수협, 업계가 함께 민물장어 자원 관리를 위한 ‘제5차 민물장어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민물장어류 CITES 부속서 등재에 대비해 2025년 6월 구성 이후 총 4차례 회의 개최

민물장어류의 CITES\* 등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과도한 입식(어린 물고기를 양식장에 넣어 기르는 것)에 따른 업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뱀장어 입식량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동북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은 실뱀장어 자원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동북아 4개국 협의회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극동산 실뱀장어의 입식량을 준수하도록 업계에 당부하고, 실뱀장어의 국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특히, 수입산 실뱀장어의 국내 이식승인 제도\*와 국내산 실뱀장어 입식량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수입산 극동산 민물장어의 한시적 이식승인 긴급 중단 조치 등을 실시하는 관리 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 외국산 실뱀장어를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생태계 영향을 고려하여 입식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이와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물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민물장어 생산자 단체(민물장어양식수협,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가 참여하는 업무협약식(MOU)도 진행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산자는 향후 도입될 ‘어획증명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어획이 증명된 실뱀장어를 우선 입식하고 자율적으로 입식량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식량 쿼터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협의회 개최와 업무협약 체결은 국제적인 민물장어 자원 보호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물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630)
		담당자	사무관	최은석 (051-773-5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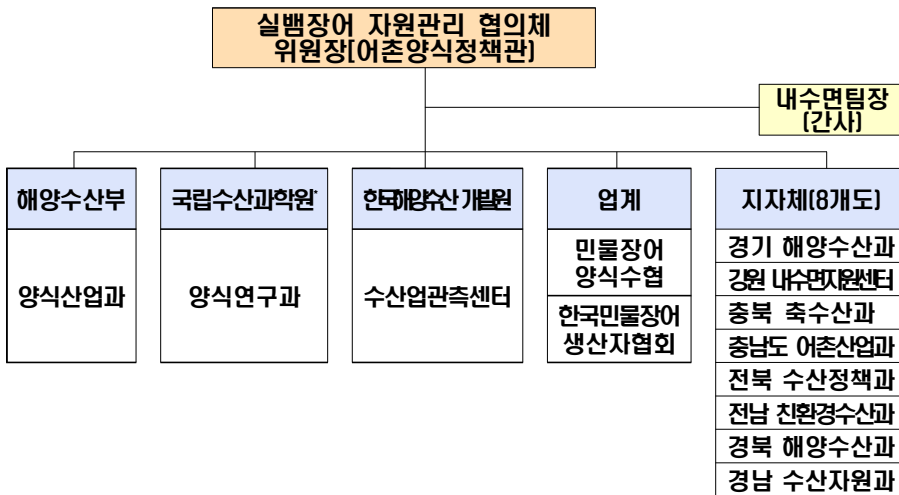


□ 추진배경

- 뱀장어 자원량 감소에 따라 국제적으로 CITES\* 부속서 등재 논의가 예정(제20차 총회, '25.11~12월)되어 있는 등 자원관리 노력 필요
  - \* 제20차 CITES 당사국 총회에 제출을 위한 뱀장어류 부속서 등재안 준비 중(EU)
  - 협의회를 통해 뱀장어 CITES 대응 및 양식·수급 조절 등의 지속적 논의

□ 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 해수부, 수과원, 지자체, KMI, 수협, 생산자협회 등 15명 이내



\* 한국수산자원공단(효과성 분석 등) 및 필요시 국립수산물과학원(연구지원과, 중앙내수면연구소 등) 해당과 참석

- (역할) 뱀장어 자원관리 및 회복을 위한 협의
  - 뱀장어 어획 및 입식량 관리 및 실뱀장어 수출입 관리 협의
  - 실뱀장어 방류사업 추진 계획 협의
  - 협의체 협의사항 주기적 점검 및 방류사업 홍보 등
- (운영계획)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개최